한나라당 李-朴 검증공방 점입가경

“악의적 허위주장 유포 홍사덕·서청원 엄중 조치하라”

李 ‘공작사건’ 반격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은 5일 경선 라이벌인 박근혜 전 대표측의 파상적인 검증공세와 관련, 공격의 선봉장격인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과 서청원 상임고문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당에 요구했다.

9일간의 ‘무대응 기조’를 접고 ‘응전모드’로 전환한 이 전 시장측이 반격의 칼끝을 박 전 대표 캠프의 핵심인 두 사람에게 겨누며 일전을 불사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

캠프는 이날 “홍 위원장과 서 고문이 사실상 불법선거 및 해당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박희태 선대위원장 명의로 두 사람에 대한 중앙선관위 고발 조치 등의 엄중한 대응을 당 경선관리위원회에 공식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홍 위원장의 경우 2005년 10월 보궐선거때 공천에 불만을 품고 탈당해 현재 당적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금의 혼탁한 경선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면서 캠프 공동위원장 해촉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조사의뢰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형준 캠프 대변인은 “당원이 아닌 자(홍사덕)가 경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당규위반이다. 당을 분열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태도를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캠프는 언론과 박 전 대표측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도곡동 땅 일부의 원 소유주가 현대건설이었고, 이 전 시장이 사장으로 있을 때 회사 측이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씨 등에게 팔았다는 보도와 관련, “지난 2002년 서울시장 선거때, 또 여러 언론매체에서 검증한 사안으로 자금흐름에 대해서도 다 소명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캠프는 ‘정치공작’ 문제를 이슈화하는데도 진력했다.

캠프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검중수부의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청와대 배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공개질의서를 발송키로 했다. 캠프 소속 정두언 정병국 윤건영 차명진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세청 양평동 전산센터를 항의방문, 개인부동산 정보 열람 전산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매각대금 흐름 파악 하면 금방 나와…진실 밝혀라”

朴 ‘도곡동 땅’ 맹공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측은 5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차명 부동산 보유 의혹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도곡동 땅’에 대해 매각 대금 추적을 통한 즉각적인 진위 판단을 이 전 시장측에 공개 요구하는 등 차명 여부를 쟁점화하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박 전 대표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땅을 매각하고 받은)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계좌추적을 하면 몇 시간, 늦어도 3~4일 내에는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이 전 시장의) 처남이나 큰 형이 주인이라면 돈 흐름만 보면 알 수 있다”면서 “당사자인 처남이나 큰 형이 ‘내 돈이니 계좌를 추적해서 밝혀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검찰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 방법도 제시했지만 “시간이 아마 엄청나게 걸릴 것이다. 대선이 끝날 때까지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면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에 의한 즉각적인 소명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박 전 대표측은 아울러 지난 95년 포스코개발에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씨와 큰 형 상은씨가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이 땅의 매각대금 흐름을 조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차명보유 의혹의 진위가 가려질 것이라며 이를 공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만일 매각 대금이 이 전 시장에게 한 푼도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면 차명보유 의혹은 간단히 해결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유입됐다면 부동산의 ‘진짜 주인’이 가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박 전 대표측은 자신만만한 표정이다. 차명재산은 전혀 없다고 얘기해 왔던 이 전 시장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회복하기 힘든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 관계자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만일 차명의혹이 진실로 드러나면 이 전 시장이 사퇴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 캠프가 정치공작소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李-朴 후보 의혹자료 유출경위 수사 의뢰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투쟁위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는 5일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와 관련된 의혹자료들의 유출 경위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안상수 투쟁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시장 처남 김재정씨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의 자료 입수 경로와 이해찬 전 총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고 최태민 목사 관련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의 전신) 자료의 작성 및 유출 배경 등을 대검 중수부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투쟁위는 또 ▲이 전 시장의 주민등록 관련 서류 유출 사건 ▲한반도운하 검토보고서 작성 및 유출 사건 ▲이 전 시장 및 친.인척의 부동산 관련 자료 작성 및 유출 사건 ▲최태민 목사에 대한 중정의 보고서 작성 및 유출 사건 등을 ‘4대 공작사건’으로 규정, 관련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선대책위 발대식 도중 당원들을 향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이날 오전 강원도 평창이 2014 동계올림픽 개최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발표되자 강원도청 앞 행사장에서 안타까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생활 보호 위한 법률안 마련에 최선”

광주 찾은 김성호 법무장관

김성호 법무장관은 5일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법질서 확립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법률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초도 순시차 광주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을 방문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젠 권력보다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면서 “법치주의가 정착되고 있는 만큼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승연 회장 보복 폭행 사건을 예로 들며 “이제는 사회 지도층이 작은 법이라도 위반하면 더욱 엄정한 법적 잣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젠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덧붙였다.

보복 폭행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의 수사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무리하게 수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FTA 반대시위 및 파업에 대한 엄단 방침에 대해서는 “한미 FTA체결로 일부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안타깝지만, ‘국제경쟁의 열차를 타고 가야 한다’는 점과 국가적인 이익을 생각하면 무작정의 반대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서민생활이 튼튼해야 국가가 발전한다”면서 “‘이자제한법’과 ‘보증인 보호법’ 등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법률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김 장관은 광주고검과 광주지검 직원들에게 대통령 선거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 사범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칙대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현장과 시각

대통합 급류 속의 박상천

임동욱
서울취재 팀장

최근 범여권 대통합 움직임이 급류를 타고 있다. 단순한 정치권의 주장 차원을 넘어 범여권 제 정파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우선 지난 4일 범여권 대선 예비주자 6인이 연석회의를 통해 ‘단일정당, 단일후보, 국민경선’ 원칙에 합의했다.

여기에 통합민주당 김효석 의원을 필두로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 무소속 지병문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대통합이 실패한다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러한 범여권 대통합 움직임은 이번 주말을 계기로 대폭 확산되는 것은 물론 다음주에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범여권 대통합론은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다.

통합민주당 출범, 열린우리당 사수파, 대선 예비주자들의 이해득실 등 정치적 역학 구도를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범여권 대통합이 급류를 타고 있는 것은 민심의 저변에서 “대통합 단일후보가 나서면 대선 승리”라는 희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호남을 주축으로 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지지층은 그동안 범여권의 분열에 따른 무력증과 한나라당 예비 대선 후보들의 고공 지지율을 바라보면서 “차기대권은 한나라당”이라고 짐작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 두 후보간의 검증 공방을 지켜본 이들 유권자들은 대통합만 이뤄진다면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관심은 통합민주당의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 통합민주당의 합류 없이는 범여권 대통합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상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는 ‘묻지마 대통합’은 대선 필패로 이어진다며 정책과 노선이 다른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국정 실패 세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대통합의 명분 뒤에 숨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 거부감도 나타내고 있다. 대통합만 추구하다간 ‘도로우리당’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또 정상적인 시기라면 박 대표의 주장이 옳을 지 모른다. 그러나 대선은 벌써 5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범여권이 통합되지 않는 한 대선승리는 어렵다는건 누구나 아는 셈법이다.

범여권 대통합이 이뤄지려면 이달 내에 모든 것이 결정돼야 한다.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다. 4선 국회의원과 법무부장관 등을 지낸 정치 고참 박 대표가 민심의 흐름앞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tuim@kwangju.co.kr